

# KWDI 이슈페이퍼

수행과제명 여성폭력 검찰통계 분석(II): 디지털 성폭력범죄, 성폭력 무고죄를 중심으로  
과제책임자 김정혜 부연구위원 (Tel: 02-3156-7159 / E-mail: kjhye@kwidimail.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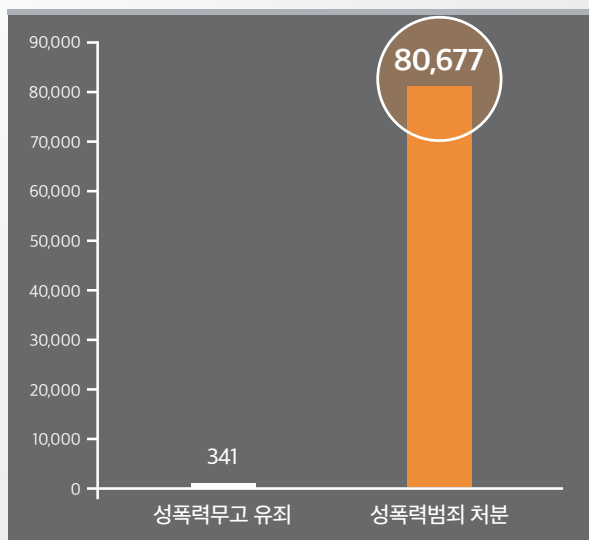
## ‘성폭력무고 고소’라는 2차 가해 -성폭력무고죄 검찰 통계 분석-

### 초록

- 거짓으로 성폭력 피해 주장을 하는 사례가 많다는 주장이 확산되어 성폭력 피해자들이 역고소 위협을 당하거나 수사기관에 의해 무고죄로 인지되어 수사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성폭력무고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사건 처리 기록을 분석함
- 성폭력무고 사건의 원사건(성폭력범죄)의 특성, 성폭력무고 사건의 규모와 특성, 성폭력무고 사건 수사 단서, 처분 및 판결 결과를 살펴보고, 전체 형사 사건, 성폭력외무고 사건과 비교 분석하였으며 수사단서별로 성폭력무고 사건 처분 및 판결 결과를 비교하였음
- 그 결과, 성폭력무고 고소 사건의 기소율은 매우 낮고 성폭력무고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사례는 극히 소수로 나타나, 성폭력무고가 과도하게 부풀려져 인식되고 있으며, 성폭력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는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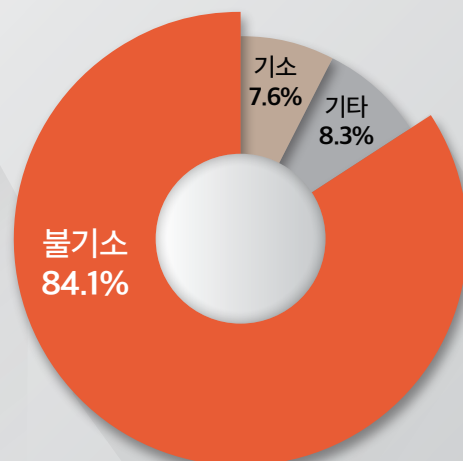
### 2017~2018년 사건 인원수

(단위: 명)



### 성폭력무고죄 고소 사건의 처분결과

(단위: %)



## 1. 배경 및 문제점

- 성폭력 피해 주장이 허위인 경우가 많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성폭력 가해자에 의한 무고죄 역고소 위협 및 수사기관의 무고죄 인지가 성폭력 피해를 드러내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 결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등 형사소송절차의 남용을 방지”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바 있음. 그러나 그간 성폭력무고의 규모나 사건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가 생산된 바는 없음. 이에 검찰 사건 처리 자료를 분석하여 성폭력무고 통계를 산출하고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

## 2. 조사 및 분석결과

### 연구 방법

- ▶ 대검찰청 사건 처리 기록에서 2017~2018년 성폭력무고 단일범 사건 1,190명(중복 제외)의 사례를 코딩하여 분석하고, 대조군으로 2017년 성폭력외무고 단일범 사건 5,368건(중복 제외)을 분석함.

### 성폭력무고 원사건의 특성

- ▶ 성폭력무고 원사건인 성폭력범죄는 ‘간음/강간/강제추행’(80.6%)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은 ‘준강간/준강제추행 및 상해/치상’(12.4%)임.
- ▶ 성폭력 피해자(무고피의자) 성별은 대부분 여성(91.1%)이며 남성은 6.1%임. 수사단서별로 무고 피의자 성별을 비교하면, 검찰인지 사건에서 여성 비율(95.2%)이 높게 나타남.
- ▶ 성폭력 피해자(무고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사례는 53명으로, 성폭력무고 고소 사건 피의자의 5.2%가 미성년자였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무고 고소 및 고발 사례 44명 중에서 1명만 기소되었고 불기소 처분 38명 중에서 26명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도 부당한 무고 역고소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 성폭력무고 원사건의 가해자 성별은 대부분 남성임.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당사자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사례가 44.9%, 모르는 사람이 8.4%이며, 나머지 46.7%가 아는 사람으로 나타나, 아는 사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서 무고가 문제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임.
- ▶ 성폭력 피해자 본인 외에 제3자가 무고 혐의를 받는 사례도 드물지 않았음. 성폭력 피해자의 가족, 친척(37.1%)의 비중이 가장 높았음.
- ▶ 성폭력무고 원사건인 성폭력범죄 발생 장소는 ‘숙박업소’(21.4%), ‘성폭력 피해자/가해자의 집’(17.5%) 순으로 나타남. 성폭력무고가 문제된 성폭력범죄 중 숙박업소에서 일어난 사건의 비율은 전체 성폭력범죄 발생 장소 중 숙박업소 발생 사건 비율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숙박업소에 간 것을 성관계에 대한 동의로 이해하고 피해 주장의 신뢰성을 낮게 평가하는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줌.



## 성폭력무고죄 수사 단서

- ▶ 성폭력무고 단일범 인원수는 2017년 536건에서 2018년 654건으로 증가함. 수사 단서로는 ‘고소’(69.2%)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검찰인지’(27.7%)였음. 같은 기간 전체 범죄 수사 단서는 ‘경찰인지’가 70% 내외로 가장 많고 ‘검찰인지’는 1% 미만임.
- ▶ 성폭력외무고 사건 수사단서 중 ‘검찰인지’는 평균 15.6%로, 원사건의 수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무고죄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성폭력외무고 사건 수사단서와 비교할 때 성폭력무고죄의 검찰인지 비중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음.



## 성폭력무고죄 처분

- ▶ 2018년 성폭력범죄 불기소 인원수는 감소하였지만 성폭력무고 단일범 인원수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음. 즉 성폭력범죄가 불기소된 경우 피해자가 성폭력무고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상승함.
- ▶ 성폭력범죄 불기소 이유 중 ‘혐의없음’ 비율(54.5%)은 절반 이상으로 전체 범죄 불기소 중 ‘혐의없음’(29.1%)에 비하여 매우 높음. ‘혐의없음’ 불기소 비율이 높은 성폭력범죄의 특성은 성폭력 피해자의 무고 역고소 또는 무고 인지 가능성을 높이는 배경이 됨.
- ▶ 2018년 월별 성폭력무고죄 처분 인원수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검찰인지에 의한 사건은 2018년 5월 이후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음. 이는 2018년 5월 대검찰청이 성폭력 범죄 성립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때까지 성폭력무고 수사를 중단하도록 한 개정 수사매뉴얼의 발표가 주효했음을 나타내는 지표임.



## 성폭력무고죄 판결

- ▶ 성폭력무고죄로 기소된 사건 중 무죄율은 전체의 6.1%로 나타남. 유죄 종류는 집행유예(41.6%)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약식명령(31.1%), 유기징역(10.7%), 재산형(9.6%) 순임.
- ▶ 성폭력무고죄의 무죄율은 전체 형사 범죄 1, 2심 무죄율과 비교하면 현저히 높음. 단, 성폭력외무고죄의 무죄율이 성폭력무고죄 무죄율과 비슷한 수준임을 볼 때, 성폭력무고죄의 높은 무죄율은 무고죄 사건의 특성으로 보임.
- ▶ 성폭력무고죄 유죄 형량 평균은 유기징역형이 0.94년으로 대부분 1년 미만으로 선고되는 것으로 보이며, 벌금형 평균은 260.6만 원, 약식명령 평균은 254.9만 원 수준임.



## 수사단서별 성폭력무고죄 처분 및 판결 결과

- ▶ 수사단서별로 기소율을 구분해보면 검찰인지 사건은 대부분(93.0%) 기소에 이르며 경찰인지 사건은 그보다 낮은 63.3%가 기소됨. 고소 사건은 7.6%만이 기소되며, 고발 사건 중 기소된 사건은 없어, 성폭력 가해자 또는 제3자에 의한 성폭력무고 고소, 고발 사건이 기소될 가능성은 매우 낮았음.

<표 1> 수사단서별 성폭력무고죄 처분(2017~2018)

(단위 : 명(%))

구분	기소	불기소	기타*	계
검찰인지	307	14	9	330
	93.0	4.2	2.7	100.0
경찰인지	19	8	3	30
	63.3	26.7	10.0	100.0
고소	63	693	68	824
	7.6	84.1	8.3	100.0
고발	0	3	3	6
	0.0	50.0	50.0	100.0
계	389	718	83	1,190
	32.7	60.3	7.0	100.0

\* '기타'에는 타관이송,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보호사건 송치 포함

- ▶ 성폭력무고 사건 중 검찰인지의 3.3%, 경찰인지의 16.7%는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되어, 무고 혐의가 없었는데도 수사기관의 무고 인지로 수사가 진행된 사례가 나타남. 고소 사건은 불기소의 절반 이상(58.5%)이 증거불충분이며, 각하된 사례도 22.8%로 높게 나타남.

<표 2> 수사단서별 성폭력무고죄 불기소 이유(2017~2018)

(단위 : 명(%))

구분	기소 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계
		범죄 인정안됨	증거불충분				
검찰인지	3	0	11	0	0	0	14
	0.9	0.0	3.3	0.0	0.0	0.0	4.2
경찰인지	3	0	5	0	0	0	8
	10.0	0.0	16.7	0.0	0.0	0.0	26.7
고소	12	4	482	0	7	188	693
	1.5	0.5	58.5	0.0	0.8	22.8	84.1
고발	0	0	3	0	0	0	3
	0.0	0.0	50.0	0.0	0.0	0.0	50.0
계	18	4	501	0	7	188	718
	1.5	0.3	42.1	0.0	0.6	15.8	60.3

- ▶ 수사 단서별로 판결 결과에 차이가 발견되었음. 성폭력무고 고소 사건으로서 기소된 사건 중 무죄의 비율은 15.5%로 상당히 높은 수준임. 경찰인지 사건은 기소 사건 전부 유죄가 선고되었고 검찰인지 사건은 기소 사건 중 무죄율이 4.5%였음.
- ▶ 2017~2018년 2년 간 성폭력무고 단일범 피의자 총 1,190명 중 유죄가 선고된 사례는 전체 사건의 28.7%(341명) 수준에 그쳤으며, 60.3%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음. 2017~2018년 기간 검찰이 수사한 성폭력 피의자가 8만 명 이상이며 불기소 처분 인원수가 3만 명 이상임을 고려하면, 성폭력 사건 중 무고 비중은 극히 미미한 수준임.

<표 3> 수사단서별 성폭력무고죄 처분 및 판결 결과(2017~2018)

(단위 : 명(%))

구분	기소				불기소	기타(처분)**	계
	무죄	유죄	기타(판결)*	소계			
검찰인지	13	273	21	307	14	9	330
	3.9	82.7	6.4	93.0	4.2	2.7	100.0
경찰인지	0	19	0	19	8	3	30
	0.0	63.3	0.0	63.3	26.7	10.0	100.0
고소	9	49	5	63	693	68	824
	1.1	5.9	0.6	7.6	84.1	8.3	100.0
고발	0	0	0	0	3	3	6
	0.0	0.0	0.0	0.0	50.0	50.0	100.0
계	22	341	26	389	718	83	1,190
	1.8	28.7	2.2	32.7	60.3	7.0	100.0

\* '기타(판결)'에는 1심 재판중이거나 법원의 소년부송치, 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사례 포함

\*\* '기타(처분)'에는 타관이송,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보호사건 송치 포함

- ▶ 성폭력범죄 혐의를 받고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을 상대로 무고로 고소한 사건 중 유죄 비율은 5.9%(1년 평균 24.5명)로 매우 적음. 이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도 상대방을 성폭력무고로 무고하는 문제를 보여주는 결과임.

### 3. 정책제언

- ④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함. 단지 성폭력 신고 내용이 입증되지 않았거나 부당한 사회적 통념에 기하여 성폭력 피해자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심으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에게 무고 혐의를 부과해서는 안 될 것임.
- ④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였다가 무고 혐의를 받거나 나아가 무고죄 유죄까지 선고받는 사례는 그 수가 적더라도 성폭력 피해자 전반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큼. 무고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위협은 성폭력 피해자를 더욱 침묵하도록 함.
- ④ 허위로 무고하였다는 적극적 증거가 없음에도 성폭력 피해자에게 무고 혐의를 부여하는 관행과 잘못된 법 해석을 중단해야 함. 특히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 역고소가 피의자 또는 피고인 측의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되며, 역고소를 부추기는 변호사의 태도는 심각한 변호사 윤리 위반으로 인식되어야 함. 또한 성폭력 피해자다움에 의존하여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무고 혐의를 씌우지 않게 하기 위해 수사기관, 재판기관의 성폭력에 대한 관점 전환이 요청됨.

#### 참고문헌

-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eigh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CEDAW/C/KOR/CO/8

관계부처 : 대검찰청 형사2과